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1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3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 출석하시는 기관장님들 계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3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한홍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립·호국·민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균형 잡힌 보훈정책으로 시대의 과제인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명예가 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처음으로 정무위원회에 인사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애정과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서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 초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내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무총리를 적극 보좌하면서 당면한 국정현안을 점검·조정하고 수요자 중심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최종 확정될 분야별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경우 입법조사관.

(인사)

두 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 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4시14분)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정해 놓고.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어요?

신장식 위원님 하세요.

○신장식 위원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둬야 된다’, ‘부패방지 분야에 한편생 바쳐 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 고인의 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국장.

당시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부산에서 헬기 이송 건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분 극단적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업무상 순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거짓말했어요. 저는 지금 유철환 위원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이미 사퇴, 스스로 물러났어야 되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발언도 없이 오늘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저 이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설 특검을 통해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전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서라도 유철환 정승윤 박종민 이분들의 거짓말,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과정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윤한홍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한창민 위원님 하세요.

○한창민 위원 이번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MBK 청문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미뤄지는 동안에 벌써 MBK의 경영진은 긴급경영체제라는 이름으로 15개 점포를 폐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과 임점업체 그리고 관련 당국, 모든 분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평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청문회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김병주 회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이야기했던 사재 출연 등등 국민한테 약속했던 일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대해서 명명백백 말할 수 있는 청문회 자리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대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9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256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215억 원과 예비비 56억 원, 이체 98억 원을 더한 6조 2931억 원 중 6조 2481억 원을 집행하고 107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보훈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56억 원을 배정받아 전액 해당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 등 133억 원 중 91억 원을 집행하고 4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1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23억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3256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노후복지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

자금 운용 등 3256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족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07억 원이며 지출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광복회관 관리 등 200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산은 3조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8989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채는 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00만 원이며 출연금·보조금의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 총 8200만 원이 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6605억 50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500만 원과 예비비 17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6623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95.9%인 6349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7억 6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6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국무조정실 인건비 사업 12억 7900만 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 4억 8100만 원으로 총 17억 61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총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국정운영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6.8% 증가한 4501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584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원을 더한 1603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자산은 2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전년보다 제재금 징수결정액 관련 장기미수채권이 874억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15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2228억 원으로 이 중 1446억 원을 수납하였고 781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351억 원, 폐업 등 납부능력 부족 405억 원, 징수유예 2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조 35억 원으로 3조 9994억 원을 지출하였고 4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등으로 9조 3273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631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신용보증료 수입 등으로 9조 4449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보증료환급,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2조 57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구상권 관리비,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5797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사업수수료,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보유주식 매각금액과 법정 부담금 등으로 5조 4432억 원을 조달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 자산은 33조 64억 원이며 부채는 26조 739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앉아서 제안설명드리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현액과 동일한 8억 9200만 원이고 부채·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총 10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8400만 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15억 9200만 원, 예산현액은 1127억 8800만 원이며 인건비 494억 7600만 원, 기본경비 71억 9700만 원, 사업비 513억 2300만 원 총 1079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3600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5억 55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572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2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303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3.9%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249억이며 법인청산종결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2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 140억 5300만 원, 기본경비로 21억 600만 원, 사업경비로 489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650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자산은 381억 800만 원으로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02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5400만 원으로 장기충당부채인 소송 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1쪽입니다.

검토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총 102개 사업에 대하여 12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 23개 사업에서 28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의 2023년도 말 3000억 규모의 전년도 이월 잔액이 유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추가로 3000억 원을 출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도 말 약 3200억 원의 이월 잔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연간 집행 소요를 면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지역개발 프로젝트 선정 후 사업 변경으로 인해 연도 내 자펀드 결성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향후 지역개발 프로젝트 선정 시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외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이 정확한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과도한 정부 재정을 출연받았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재정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총 8개 사업에서 12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부패예방추진단이 2014년 임시 조직으로 신설된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므로 조속히 조직 운영 지속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 5개 사업에서 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제·개정이 자연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등 관련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이 법률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11개 사업에서 1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개발 결과 대부분을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상담 수요 폭증으로 상담수당 예산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부족한 대금을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서는 총 16개 사업에서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형태와 관련하여 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례도 발견되었으므로 계약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연구원의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인력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고 예산집행률과 사업의 성과도 부진하였으며 현지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기관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으므로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본) 8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총 29개 사업에서 3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보상금 사업은 2024년 712억 4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711억 83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였는데 대규모 집행 잔액의 발생과 이를 활용한 연례적인 이용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 예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훈 대상자 시내버스 이용 요금 대납액 중 99억 2500만 원이 미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누적된 미지급액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10개 사업에서 1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홍보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어 추진되었는데 홍보는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간 집행 계획을 균형 있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끝났고요. 이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신청하실 분? 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크 좀 해 주세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너무 짧아요, 위원장님. 5분 하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5분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으로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이양수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십시오.

박찬대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안 하시지요?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세요.

○이양수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양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이 총 1319억 원이 좀 넘습니다. 맞나요?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환급액 비중이…… 언론보도 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양수 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세계일보에 나온 그 내용 말씀이신가요?

○이양수 위원 환급 사유가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판결 접수 후 8일 만에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환급을 8일을 넘겨서, 기한을 넘겨서 처리된 것이 많고 가장 많은 것은 41일이나 걸려서 환급된 것도 있고요.

보도를 보고받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양수 위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한 43%, 절반 가까이를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43% 관련해서는요, 패소하면 일단 전부 돌려주고 그중에 다시 저희가……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하면 돌려주는 금액이 이렇게 40%가 넘는다는 거는 평

상시에 마구잡이로 그냥 과징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실제로 저희가 돌려준 다음에 다시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금액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인정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도 공정거래위가 승소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매번 과징금 환급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일정 부분 있다는 거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있습니다, 그런 게.

○**이양수 위원** 늘고 있다는 것도, 추세도 인정을 하시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거는 해마다 변동이 있어서 추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도하게…… 공정위가 힘이 세잖아요? 큰 기업들을 상대로 하면 큰 기업들은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면 부당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해야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징금 받을 때 이미 업계에서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는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양수 위원** 기업, 검찰, 공정위가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갑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행정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에 그 부과한 담당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런 제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문책을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이거 전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런 제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 직원들의 선의만 믿고 잘할 거다, 과징금 부과하는 것에 착오 없이 잘할 거다 그냥 그것만 믿고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시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담당자가 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사위원이, 심사관이 조사하고 심사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양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과징금 부과 환급액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게 이렇게 43%씩 발생이 된다는 것은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실제 금액은 그보다 일단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양수 위원** 실제 금액은 적은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과징금 집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100% 환급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저희가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를 해서 43%나 환급이 된다 그러면 업무 처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수치는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3%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양수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에서 제출한 자료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의미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정위가 힘이 세기 때문에 힘없는 중소기업, 대기업은 방어 능력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영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사용하는데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조치를 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그래야 직원들이 신중하게 과징금이나 환급액 같은 걸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해 놓고 나중에 패소하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과징금 쳐분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K가 자기들이 홈플러스 살리겠다고 사재 출연까지 하겠다 이런 소기의 각오도 밝히고 절대 청산해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개 점포를 폐점하면 사실상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BK 측에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MBK가 지금 여러 기관전용사모펀드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MBK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확히 조사가 되고 또 금감원이 조사했듯이 그 위법행위가 확인이 돼 가지고 제재를 하면 당연히 그 기관…… 대표적인 기관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먼저 출연하면 그거에 따라 은행들 증권회사들 출연해 가지고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MBK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가 MBK가 운용사가 되는 사모펀드에 출연할 리도 없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안에서 견제가 일어날 텐데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오니까 여전히 MBK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홈플러스 관련된 전단계 발행하는 데 사기적 금

융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판단해서 MBK를 제재를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그런 증권사들도 판단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위하는 위탁 운용사에 돈 안 맡기겠다, 사모펀드들 지금 다 돈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들 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MBK 같이 부도덕하고 위법행위하는 위탁 운용사에 돈을 맡길 수도 없고 맡긴 돈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하게 되면.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 돈 모으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사모펀드 제일 많이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MBK가.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정확히 결단을 내려 줘야 된다. 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이나 홈플러스 인수하는 과정에도 위법행위가 있어요, 차입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홈플러스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결국 그걸 갚는 걸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해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금만 조사를 하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MBK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 제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기다가 돈을 출연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판단할 거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금융위원장 김병환 사기적 금융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 통보를 해서 지금 강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조사에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고의성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 어느 천년까지 기다려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4월 초인데 지금 벌써 사오 개월 지나고 있어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고용, 입점 상인들, 납품 이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민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검찰청에 가서 항의하고 그런 것도 할 텐데 그 수사가 끝나야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금융위·금감원이 MBK의 이런 사기적 금융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이상 MBK하고는 이제, MBK가 만드는 사모펀드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MBK는 퇴출되는 거예요. MBK가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계속 MBK가 돌아다니고, MBK는 자기가 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지금 와서 뻔뻔하게 ‘15개 점포 폐점해 가지고 홈플러스 청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감독당국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지금 몇 개월째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판단이 안 돼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은 사실 강제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전임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어차피 업무를 승계받으셔 가지고 점검도 하실 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ODA 사업 관련한 얘기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ODA 사업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이 실무자로서 총괄을 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실행부서는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2022년에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11월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을 합니다. 통상 윤석열의 외교라는 것이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지요. UAE를 방문을 해 가지고 소위 무기 수출 건, 많은 금액의 그러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자랑을 했는데 이때 캄보디아를 방문해 가지고 정상회담 한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국과 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달라라는 훈센 총리의 당부 또 한-캄보디아 이중 과세방지협정 이건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고요, 없는 나라와는. 또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게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내용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ODA 지원은 수년 동안 계속돼 왔지만 2023년, 24년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했어요. 한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 한 4위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이 보니까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뒤에 뭘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ODA 지원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이유를 좀 아세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동안에 약속됐던 사항들이 본격화되면서 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외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돼서 액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따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위원** 혹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같은 것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특검이 아직 일을 여기까지 안 했구먼.

통일교 측에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서 소위 피스파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통일교가 직접 아마 사업 주체로 관여를 했고 여기에 일종의 시공감리를 맡은 희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기도 하고, 코바나컨텐

츠 아시지요? 또 이 피스파크 캄보디아 ODA 원조사업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그런 업체 기도 합니다. 김건희와 일종의 이 ODA가 만나는 거예요. 이 연관성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70% 이상 ODA 지원 액수가 늘어났고, 그 성과나 진행 여부나 이런 것들은 총리실이나 실행부서에서의 점검사항은 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왜 특검이 아직까지 안 부르지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봉지욱 기자라는 분이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너무 잘 알지요?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말에 윤석열이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정상회담을 했고 그 뒤에 기하급 수적으로 ODA 지원 액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현지 대부업체에 대한 송금 문제, 돈 세탁 문제가 불거지고 이랬을 때 여기서 풍기는 비리 의혹이라는 것이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으로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관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고 사항을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태까지 해 오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갑자기 더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보훈부장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조금 되셔서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떤 숫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합니다.

○**柳榮夏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18일 날 장관님 인터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인사에 대해서 갈등이나 분열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기억합니다.

○柳榮夏 위원 장관님의 기본 취지 존중합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만 암만 좋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저분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알박기 사례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분들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임기 다 채웠어요, 지금 재직하시는 분도 있고. 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인사에서 분열을 조장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관이,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적해 드렸지요, 전문성이 정말 부족하신 분이라고. 이런 정치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업무부터 파악하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것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봤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기에 지적된 독립유적지 중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게 어디입니까, 6개 중에서? 또 자료 보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안경이 지금 없어서…… 죄송합니다.

○柳榮夏 위원 안경이 없어 모르신다?

저 사설 보고……

자료를 주세요.

저 독립유적지, 신문 사설에 지적된 게 여섯 군데예요. 그중에 현충시설로 지정된 건 한 곳이지요. 그렇지요? 어디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지정된 곳은 서비정. 석수암, 서비정……

○柳榮夏 위원 서비정이 어디 있어요? 서비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을 안 가봐도 위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훈부장관이! 경남 고성에 있습니다. 답변 자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독립기념관 등 유관기관과 병행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번이 광복 80주년 아니겠어요? 이대로 두면 이런 독립유적지, 사적지가 다 없어집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사설이 되면 현장을 먼저 가 보시는 게 장관의 기본 도리예요, 앉아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돼 있고……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도 폐타이어와 가림막으로 비를 막게 했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지정 안 된 곳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현장 담당자들한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거고 지정 안 된 곳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지정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국가보훈부장관의 기본 태도입니다, 태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24년 12월 9일 날 보훈부에서 독립기념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감사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보고받은 내용이 뭡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柳榮夏 위원** 구두로 보고를 언제 받았는데 지금 그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고받은 것 맞으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하여튼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柳榮夏 위원** 아니, 감사 지적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기념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현행 지금 관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전에 기존에 감사 지적된 사항 챙겨 보시고 감사 지적된 사항이 이 행됐는지 그것부터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코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업무가 보훈입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시작하기 전에, 김형석 관장이 나와 있나요? 김형석 관장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일단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용이 어떻게 됐든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김형석 관장님이 윤석열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이 되고 면접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신 분 맞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앞부분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앞부분만 발췌해서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관련된 연구에……

○**김용만 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김용만 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시고 계시다, 아니다 대답을 하시라고요. 지금 제 질문이 어려워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세요, 지금.

○**김용만 위원** 지금까지 시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세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김용만 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니까 시간이 가야지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우리 국민들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독립기념관장 취임한 이후에 그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런 생각을 하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가니까 또 이슈가 돼서 이번 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타율적 해방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얻어걸린 것이다.

그런데 이 연설문이 연설문 담당관이 쓴 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 작성하신 것이지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독립기념관에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맞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김용만 위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공공기관의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처럼 경축사를 내부 연구 조직에서 작성하게끔 하겠다’, 대책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맥락의 취지입니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저는 민족사적 시각에서 독립운동의 결과로 광복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해 왔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용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김형석 관장님이 독립기념관으로 갔을 때 걱정한 게 이거예요.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장이 왜 세계사적 입장을 얘기합니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것은 전체 맥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세계사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하지 않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얻어 내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대한민국이 카이로 선언처럼…… 얼마 전에도 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 몇몇 분들과 같이 임시정부 루트를 쫓아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부장관도 국무조정실장도 보훈부장관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세계사적 역사 풀이를 자꾸 얘기하니까 혹여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본인이 독립기념관에 갈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7월 25일에 취임하셨지요,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7월 25일입니다.

○**김용만 위원** 예, 7월 25일에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한 달이 채 되지가 않았는데 별씨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저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광복회 회원님들이 독립기념관 가 가지고서는 시위하고, 뉴스에 나오고…… 여기 이정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천안에 있는 분들도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저랑 다 얘기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것이고. 이것 반드시 인사 검증 절차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빠르게 해 가지고……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조치할지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 빠르게 정리해 가지고 피드백 좀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어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말씀하세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기념사의 전체 맥락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도 잘라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신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들어가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실장님,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청년정책조정실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김준민** 국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청년정책국장입니다.

실장 안 나왔습니다.

○**신장식 위원** 실장 안 나오셨어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김준민** 예.

○**위원장 윤한홍** 답변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신장식 위원** 예, 그러면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직접……

○**위원장 윤한홍** 예, 그레세요.

○**신장식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위탁사업 할 때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면 수탁사무의 종류 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해서 사무편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맞지요? 그다음에 감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리실에서 민간위탁사업 한 것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하나는 정부업무형 지원센터 민간위탁한 게 하나 있고요, 중앙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한 게 있어요. 선정

과정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업무 하나는. 그런데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입찰가격평가 최하위, 즉 제일 비싸게 써냈는데 선정이 됐어요.

두 번째 사무편람, 수탁사무 관련 규정 아까 보여 드린 것, 하나는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청년지원센터,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편람 어떻게 승인받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세 번째 평가,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다 감사를 했는데,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중앙청년지원센터는 감사보고서가 없어요. 그냥 정례보고를 감사로 대체한다고 국무조정실에서 답변을 해 오셨어요. ‘감사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 답변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중앙청년지원센터 위탁받은 데가 어디냐? 다음 것 보세요. 장예찬이 이 사장으로 있는 데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부터, 선정위원회에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 외부 선정위원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사무편람에 수탁기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없는데 승인이 됐어요. 감사보고서 없어요. 2년을 지금, 2023년·24년 정례보고로 감사를 대체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 승인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 청년정책조정관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시겠어요, 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장예찬 재단에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신장식 위원 아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건국절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 이야기하고 친일인명사전 재평가해야 된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다, 8·15는 하늘이 준 땅이다 이런 얘기 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막말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 실적, 예산집행도 형편이 없어요. 독립기념관 C등급 받았습니다. C등급 받았는데 C등급 받은 이유가 뭐냐? 윤리경영 D 그다음에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D.

독립기념관이 이것 하는 데 아니에요?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사업 하는 게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 아닙니까? D예요, D.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외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책정해 놓은 예비비 2억 7000만 원 중에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1억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매번 받아 오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을 못 받으니까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아요, 관장님 경영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규정만 있고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해촉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보훈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청문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명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라는 대법원 판례 있어요. KBS 사장 해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장관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으니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그제 광복회에서 독립기념관장 해임 촉구 및 감사신청서를 저희 부에 보냈습니다. 감사법에 의해서 보훈부에서도 감사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 감사원에 오늘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병환 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서면질의로 금융감독원 감독 좀 잘하시라……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법원에서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결정 내렸는데 항소하고 아직도 공개 안 해요.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좀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은행도 감사원 감사 통해 자회사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 지적됐습니다. 이것도 금융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넣었으니까요, 소위원회 심사할 때 답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웰바이오텍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것 아시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어디 말씀입니까?

○**김현정 위원** 웰바이오텍.

○**금융위원장 김병환** 못 봤습니다, 보도는.

○**김현정 위원** 웰바이오텍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삼부토건은 꼬리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수도 없이 질문했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금감원에서, 2004년도 7월 달에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삼부토건이 이상징후 심리에서 걸려서 9월 달에 금감원으로 넘겼잖아요. 그다음부터, 9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끊겠어요. 그것 알고 계

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웰바이오텍 얘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현정 위원 아닙니다, 삼부토건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인 데요.

○김현정 위원 저희가 하도 조사를 안 해서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단체로 항의 방문까지 갔는데 그때마다 했던 대답이 뭐냐 하면 ‘금융감독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답변만 했거든요.

조사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웰바이오텍이 같은 동일인 회사고 관계 회사인데 웰바이오텍은 같은 시기에, 200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으로 두 달 사이에 5.5배 급등한 그 시기에 같은 동일인 회사인 웰바이오텍도 똑같은 시점에 그 정도의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그만큼 났다, 비슷하게 났다 이 얘기도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웰바이오텍은 전환사채를 그 당시에 주식 시세의 3분의 1의 헐값으로 사모 방식으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400억의 추가 이익을 누군가에게 줬다, 그것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한 것 들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그때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조사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금융위는 혹시 그때 금감원에서 웰바이오텍 조사한 여부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실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따로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현정 위원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그러면 혹시, 삼부토건은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으로 넘겼는데 웰바이오텍은 이상징후 심리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확인해 봐야 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왜냐하면 제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고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현정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지금 웰바이오텍이, 특검에서 본 위원이 가서 자료 주고 설명하니까 전담 팀을 꾸려서 결국 압수수색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웰바이오텍의 사장이 구속영장 신청하니까 도망간 이기훈이잖아요. 이기훈 회장이에요, 웰바이오텍이. 그리고 삼부토건의 부회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주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뭉갠 것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확인을 부탁드렸던 그 내용이, 만약에 웰바이오텍이 실제로 이상 징후 심리에 걸렸는데 금감원으로 넘기지 않았거나 또는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어쨌든 웰바이오텍은 고발 안 한 것이잖아요, 금감원에서. 그렇지요? 삼부토건 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 윗선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문제입니다. 추가조작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있었지요, 추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신속하게 적발을 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직원까지 다 파견된 통합적인 감시단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이렇게 각자 했던 그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인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사실상 권한은 같은데 과거에는 거래소에서 먼저 심리를 하고 단계로 넘기던 것을 이제는 그냥 같이 모여서 중요 사안을 한꺼번에 보고 정리하는,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웰바이오텍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 수사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이상징후 심리와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끝으로 답변을 드리면 삼부토건의 경우에 제가 청문회 할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했는데 감독원에서 사실 결과가 나오는 데 좀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평균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감독원에서 추가조작을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검찰에 통보하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7~8개월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의도적으로 지역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판단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정 위원** 그것 평균 7~8개월 걸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금융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훔플러스 이게 청산되면 2만 명의 근로자 그리고 수십만의 입점업체 상인들 그다음에 전단채 피해자들, 경제적 파장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M&A 중이잖아요. 인수를 할 곳과 관련해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도 정확한 시장의 평가나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원매자들이 많은 상황이 조성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청산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과정은 또 봐야 되니까요.

○**민병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그냥 넘 놓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도 사실 고민이 좀 많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워크아웃하고 다르게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인가 전 M&A 승인받고 이런 것도 다 그냥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저희 금융당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회사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그것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제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또는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입점업체나 이런 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워크아웃하듯이 채권단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기업회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어떤 팀을 만들어서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단계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파장도 있을 테고 하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가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리고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 그대로 뒤도 되는지, 공모하고 달리 사모는 모집할 때 사모지 그 돈 자체는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진 돈을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마련해 봐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것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개보위원장님, 리멤버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게 5억 장 이상의 명함이 있고 50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정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사모펀드에 인수돼서 팔리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걱정들이 많던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명 정도의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회사 지분 구조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외국에 이전한다든가 이런 계

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불안요소가 있을……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만 저희가 선의로 믿을 게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 개보위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상황 파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자본에 인수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을 건데 이 사례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보훈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충시설 관련해서 지금 1001개의 실태점검을 광복절 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됐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001곳 중에서 436곳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면 정부가 현충시설로 지정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는 소유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젊은 후손은 도시로 떠나고 늙은 후손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예산 투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안 그래도 현충시설 전체,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 지정된 곳은 지금 전국 곳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지정된 곳은 아까 유영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우선순위를 뒤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말씀하시지요.

○박상혁 위원 2025년 8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사망한 고인의 1주기가 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날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된, 좀 전에 신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카

특을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또 인사혁신처에는 사망경위서와 함께 다 제출됐던 것으로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날 처음 봤기 때문에 작년, 우리가 1년 전 그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은 후에 여기 계시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당당하게 이게 김건희 씨 명품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박상혁 위원** 이번 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이 유서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져서 제대로 읽기가 정말 어려운데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 이 소중한 제도—5개 반부패 법률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이런 것들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이 국장님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을 목숨으로 치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은 수장으로서 이분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왜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 잘못을 대신하려고 한다는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당시에 그분이 어떤 잘못을 하셨다고 기재를 하신 건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상혁 위원** 저희들이 그때 분명하게 ‘이것은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에 의한 사설상의 타살이다.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권익위와 대통령실에 의한 타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 외에 다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재명 당시 대표의 헬기 사건 이런 것들을 운운했던 게 그 자리에 있던 유철환 위원장, 박종민 그리고 심지어 부산교육감을 나갔던 정승윤 씨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번 그때 몰랐다고 합시다. 이제 알게 됐지요, 이분이 왜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백배사죄하고 천배사죄하고 수사를 받고 이러는 것이 맞습니까?

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수사를 덜 받으려고요? 아니, 그러면 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만난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지금도 그 당시의 결정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말고요. 지금은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냐고요? 이

제 알았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지금도……

○**박상혁 위원**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그 당시 결정……

○**박상혁 위원** 이분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 명품백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지금도 청탁금지법상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결처리가 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무혐의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그리고 항고도 기각됐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혁 위원** 다시 한번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태도.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서 다니는 이런 수장이 조직을 대표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퇴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 다 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질의하십시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 중에 대테러센터가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있습니다.

○**허영 위원**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조정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는 대테러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동의합니다.

○**허영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화면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관·경·검 합동조사단에 의한 서버에 대한 공동 조사를 스스로 제안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동의 참여자가 적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동의 참여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버 공개 청원 링크를 첨부해 가지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초한전뿐만 아니라 여러 서적들이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여기서 초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을 뜻하는 말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줄곧 옹호해 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중국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주장한 말입니다. 즉 지난 총선의 결과가 중국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폄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직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서 음모인지 의혹인지 밝혀야 한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하고 입장을 밝혀 왔지만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마지막 화면 봐 주십시오.

현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에 ‘국민저항권 발동 조건 합당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고 링크도 달고 막 그렇습니다. 이 글은 작년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탄핵에 반대한 인사들이 서부지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방화를 기도하고 판사를 해치려 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동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서부지법에 난입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벌인 폭도들의 폭동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포장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불법계엄 자체도 옹호했던 그런 글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 누가 올린 글인지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처음 봤습니다.

○**허영 위원** 바로 실장님의 조직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센터장이 올린 글입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이 글들을 근무시간에 하루에도 서너 개씩 올립니다. 이런 사람 가만히 두실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주시면요 저희가……

○**허영 위원** 제가 자료 뽑은 것만 해도 이렇게 한 다발이에요. 폐북에 이러한 반동적이고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한 글들이…… 지금도 벼젓이 대테러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공직자가, 그것도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무시간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파면·해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님, 제가 광복절 기념사 읽어 봤는데요. 여기에 함석헌 선생의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 글을 가지고 ‘역사 해석의 이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함석헌 사상을 완전히 모독하는 글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해방은 하늘이 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떡이라고 얘기한 것은 민중, 씨알들의 오랜 투쟁에 보답해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엔군 승리가 준 그 선물의 떡이다 이렇게 둔갑을 해서 해석을 합니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책을 그대로 보시면 둔갑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확인해 보십시오.

○**허영 위원** 함석헌 사상을 오래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해석이에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아니, 책을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들어가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원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민들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2022년도에 9조 800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조 6000억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작년에 9조 3000억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의 2025년 2월 28일 자 보도자료인데 감소된 것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근로자햇살론 6200억 감소, 햇살론15 2200억 감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0억 감소, 햇살론뱅크 1000억 감소, 다 정말 절박한 서민들이 단기 혹은 정말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이게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가 대위변제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지금 저런 정책금융들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어쨌건 생생,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회생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줄이니까 보시다시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4년 1만 5000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9800건, 연간 1만 9000건, 2만 건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게 풍선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24년에 준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대위변제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목표를 11조 8000억으로 늘려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책서민금융이 준 영향만은 아닐 겁니다

만 말씀하신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대위변제액을 보면 2024년도 하반기 6개 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액이 6676억으로 16.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금융위에서……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액도 21% 정도 감소했고, 이런 관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건전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실기업에 대한 국가의 어떤 지원은 혹시 얼마나 될까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솟자 전체를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는……

○**김승원 위원** 늘 저희가 하는 얘기, IMF 때 금융지원이 거의 100조 가까이 기업들에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구조조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60%, 7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공적자금 기준으로 보면 한 70% 중반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삼사십 조를 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 대위변제액 예컨대 1000억, 2000억 아끼려다 정말 절박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몰려서 사실 연이율 3000% 이런 이자에 허덕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연착륙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취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들어나도록 재원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뒤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 계신가요?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 예.

○**김승원 위원** 잠깐 나와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는지 혹은 대책이라든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 지원을 하는, 보증을 서 주는 대상들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분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면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후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복합 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인 경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점 감안해서 서민들에게 자금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또 상환 여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정리 멘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1분만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서민금융 중에 이런 근로자햇살론 그것 말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든가 일부 서민금융은 연이율이 한 17% 되지 않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 예, 최고는 15.9%인데……

○**김승원 위원** 15.9%,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낮아졌네요?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 9.9%까지 하락……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과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 상품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보훈부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뜯금없이 정창수 나라 살림연구소장이라는 분이 ‘보훈부가 갖고 있는 88골프장 이것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왜 갖고 있느냐, 왜 안 파느냐, 이래 가지고 나라 살림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대통령께서도 ‘이것 왜 안 팔고 있지요? 이상하네’ 이야기하셨는데, 보훈부장관님, 88골프장 매각과 관련된 입장은 뭡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88관광개발 주식회사 매각 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1년에 한 130억 수익이 나고 이것이 보훈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비보조 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창수 나라경제연구소장님과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매각에 대해서 검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보훈부에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당시 토론이나, 대통령께서는 매각의 당위성·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보훈부장관님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 사업……

○**추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리고 그 토론회 이후로 그러면 대통령실에 보훈부장관님의 생각을 전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아직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추경호 위원** 뭐 다른 검토 요인이 더 있습니까?

우선 사실관계가 이게 1조 이야기 하는데 1조 정도 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1조 안 됩니다. 한 40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2배 이상 뻃튀긴 거네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빨리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보유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장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굉장히

히 신중해야 된다, 매각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 아직 전하지 못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록리조트는 계속 늘려 가는 그런 가운데 이것하고 뉴서울CC는 매각 의견을 내는 것은……

○**추경호 위원** 아마 상록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수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훈부가 직접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우리 산하단체입니다. 88관광개발 주식회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보훈부가 골프장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1인 주주로 돼 가지고, 명목은 보훈부장관 1인 주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추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88년도에 개장을 했고 그 이후에 2008년부터 계속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등에 따라서 계속 매년 매각 계획이 잡혀 있고 금년 세입에도 매각 전제로 수입이 잡혀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부장관님은 전혀 매각 계획이 없으시다 이런 방침이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매각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재부에도 가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추경호 위원** 하시고, 대통령실에도 방침을 정해서…… 다음 회의 때 제가 기회 되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정확지 않은 그런 숫자나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통령 토론회 앞에, 그것도 토론회 발제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 가겠다고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이 그런 숫자의 과대 포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부처나 특히 해당 장관님은 분명한 사실관계와 방향성에 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다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기관이 골프장까지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굉장히 강하게 있고 한쪽에는 보훈부장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하셔서 다음 기회에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청주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기념관장님은 지금 직업이 뭐지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이강일 위원** 독립기념관은 공공기관이지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념관장님의 역사의식 이전에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굉장히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이전 정부 알박기니 뭐니, 저는 지금 그런 걸로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말 맞는 의식이라든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걸로 좀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본인께서 자꾸 말 때문에 지금 구설에 오르고 공격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이강일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커던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잘못되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요, 모든 나라들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일을 만드신 특정 국가의 대통령에 대해서 밖에서 사설에서라든가 사담으로 깡패니 강도니 무뢰배니 이런 얘기 표현하는 것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단어 쓰는 것 보셨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말과 행동이라는 게 있고 단어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기념관장님의 단어 표현이라든가 말 표현 같은 것들이 자꾸 구설에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이번 기념사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민통합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거두절미해서 일단락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오늘도……

○**이강일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단어를 표현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를 자꾸 표현을 쓰기 때문에 계속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일 위원** 아니, 전체 맥락을 모두 다 이해하는 국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써야 되는 단어나 문언, 문구를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참 어이가 없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정치하시는 정치인으로 오셨나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아닙니다.

○**이강일 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정치하실 사람입니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관이거든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해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냈다라는 궁지의 표현으로 만들어 내는 기관 아니에요? 거기 전시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예.

○이강일 위원 그런데 표현하실 때 우리나라 선조들을 일본인이라고 표현하시고 지금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표현, 단어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은 관장님 머릿속에 우리의 순수한 독립기념사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이강일 위원 여기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라든가 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자꾸 구설이 나오게 행동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미숙한 행동 아닙니까? 본인한테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언론을 보면……

○이강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계속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구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 정부는 이미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바꾸라고 하는 위임을 해 줬는데 거기에 맞는 기념관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옷을 벗으셔도 학계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독립기념관장이나 새로운 현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금융위원장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법조인인 사위의 인사청탁뇌물로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 줬다는 자술서가 나왔거든요. 듣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보도는 봤습니다.

○이강일 위원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시에 서희건설 임원 13억대 횡령 사건이 밝혀지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주식거래 정지돼 버렸어요. 무슨 상폐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면, 김건희 리스크까지 해 가지고 추가가 폭락 사태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횡령액이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래소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버렸고요. 상장폐지 거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장폐지 요건을 좀 더 긴밀하게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상장폐지까지 얘기되고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의도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거래소에서 아마 정해진 절차하고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조실장님도 이 서희건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서희건설이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입주자들한테 분담금 있잖아요 이것 굉장히 대폭 올리는 대표적인 회사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시 서희건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시는 게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저희는 뭐 특별하게 지금……

○이강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이강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혹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상황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오늘 홈플러스 경영진에서 15개 점포 매각에 대해 발표하시는 것 봤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한창민 위원 이르게는 5개에서 6~7개 이 정도는 올 11월에 그리고 15개는 내년 5월까지는 매각을 완료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10만 명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붕괴까지, 이것 굉장히 영향력이 큰 민생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수사 단계만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기업의 회생절차나 매각, M&A 관련한 것을 지켜보는 이런 단계로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공적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정책이라는 게 바람직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런데 행정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제약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이건 우

리 일 아니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매각하지 마라, 점포 매각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창민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경영진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아니면 편법적으로 기습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지금처럼 본인들의 이익은 그대로 고스란히 최소화하고 어떤 피해는 노동자들과 입점업체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불법행위 조사가 필요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자체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한창민 위원**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올 3월부터 진행된 상황이 많은 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지금 관계 당국에서 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들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검토된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부가 나서서, 이 회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을 정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창민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지나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법원에서는 M&A를 통해서 이걸 정상화하자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M&A가 성사돼서 누군가가 신규로 인수해서 정상화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피해자들 구제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계속 여러 단체에서 비판하듯이 사모펀드가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사모펀드 관련 법의 개정안,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모펀드가 운영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 사측에서는 본인들 입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생 문제의 하나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관계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색해야 될 때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것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 계신데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과 지역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지,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한기정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다음번쯤에 혹시 못 뺄지도 몰라서…… 다른 부처들도 잘했습니다만 공정위의 업무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봤는데 제가 아주 작은 거지만 한 가지 좀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연구개발 과제들을 발표하면 그 결과 다 보고받고 그럴 텐데요 그 결과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비중이. 그것은 본인도 알고 계실 테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몇 년 하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이인영 위원** 22년, 23년, 24년, 대체로 10%, 20%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조사가 연구용역 실태조사하고 정책·제도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해 줘야, 사업자들이 협조해야 실태조사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민감한 정보를 내줄 때는 비공개를 전제로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가 실제로 많이 담겨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 성격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로 공개하면 그게 공정위의 입장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시기를 조금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공정위의 정당한 입장이면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한기정 위원장님이 계시기 이전에도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죄송하지만 공개비중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40%, 50% 이렇게 나타났었던 말이에요. 우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용역 과제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제목만 볼 수 있는데 제목만 봐 가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비공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직접 연구 결과 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기업의 영업비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민감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공개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돌아온 거면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 수 없는 처리를 해서라도 공개되는 방향으로 자꾸 잡아 나가는 것이 민주정부의 발전 과정이고 그 민주정부 안에서 각 부처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인 거지, 더군다나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폐쇄적으로 하면 이게 시장의 어떤 공정한 질서 그리고 국민들이나 소비자, 대중의 어떤 많은 공유 과정에 근거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가는 이런 정신과 비교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가시기 전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부분 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2년에 48%, 2023년에 69%, 2024년에 72% 이렇게 해서 부분 공개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 할지라도 대체로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부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최대한 공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보훈부장관님한테 그냥 기본적인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한 하나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가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사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들은 많아도 편하될 영역은 적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보면 독립투쟁, 경우에 따라서는 무장투쟁 이런 것들만 있지 정부와 관련된 이런 완결적 구조를 가진 나라의 사례들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완결적 형태를 갖춘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적어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럴 겁니다. 무슨 빨치산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게릴라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무장투쟁 조직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완결적 구조를 가지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임시정부가 광복군까지 있잖아요. 그런 정부의 완결적 구조,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군대조직까지 이렇게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서 독립운동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되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독립운동의 역사로서 자랑거리지 이게 편하될 그런 역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타국 사례하고 비교사적인 연구 결과들을 만드셔서 좀 다시 세워 냈으면 좋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율**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이런 걸 잘해야 친일 그런 유의 역사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또 아니면 외국에 의해서 해방된 것처럼 오인되는 이런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독립운동사, 독립투쟁사가 아주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이런 것들로 반드시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일부가 시비를 걸어도 우리 역사의 도도한 흐름들은 아주 굳세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는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투쟁이 사건들이 몇 개가 있으면 자주적인 독립투쟁의 역사이고 몇

개 미만이면 외세에 의한 독립의 과정이고 이렇게 양적으로 구분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양적이고 질적인 모든 과정에서 우리 독립투쟁사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당당하게 세우는 과정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정문 위원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질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김형석 관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형석 독립관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광복절 기념사 관련해서 진솔한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그런 사과는커녕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또 위원들에 대해 반박 내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픔을 느꼈는데요.

현재 김형석 관장님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광복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 독립기념관 내부에 있는 노조에서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에서는 광복회 회원들과 시민단체들이 현재 독립기념관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것은 미처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지금 점거 농성하고 있습니다, 독립관장실을. 그래서 저도 내일 우리 천안 지역사회와 함께 김형석 독립관장 퇴진 집회에도 2시경에 참석할 상황인데, 오늘도 들었고 또 광복절 경축사를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보훈부장관님께서는 김형석 관장님의 여러 해명도 있으시지만 그 경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용어는 물론이거니와 그 메시지 자체가 부적절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이정문 위원 그래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보훈부 입장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작년에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이런 명문 규정이 없는 거를 알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권자한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법도 사실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보훈부에서도 법안 심의가 열린다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법 개정 전이라도 저는 적극적인 해임 건의 등을 포함한 내용을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측에 전달하기 바라는 입장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희 보훈부가 오늘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 보훈부에서는 전혀 감사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감사법에 의해서 양 기관이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보훈부보다는 감사원이 훨씬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에 오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문 위원** 감사 이외의 어떤 방법이라도, 의사표현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고받기로 현재 독립기념관장, 현임 독립기념관과 독립기념관장이 전임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께서 하셨던 예전의 행위에 대해서 직원들과 전임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건 미처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 보고 안 올렸습니까, 독립기념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지금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전임 한시준 관장 시절에 한 행위에 대해서, 명퇴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독립기념관장께서, 수장께서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것 부적절한 소송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부분은 좀 전의 경축사와는 별개의 내용인데—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부당한 소송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독립기념관 측에 철회 내지는 이런 부분도 요청하는 방법을 한번 하시고 그 내용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살펴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방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앞에 한시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게 24년도에 감사가 있어서 아마 변상 판정이 있었을 겁니다. 6000여 만 원의 변상 판정이 있는데 그 변상 판정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취인불명이라든지 폐문부재로 해서 판결 독촉장이나 이런 거를 수취를 안 하니까 그거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거는 다들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회님, 작년에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피해 입은 소비자를 어떻게 지원해 왔지요? 한국소비자원 집

단분쟁조정제도 이용해 왔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좀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티메프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자도 굉장히 여러 사업자가 얹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티메프의 재무 상황이 열악해서 조정안 수락률이 좀 낮았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것은 결과에 응한 업체보다는 불수락한 업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李憲昇 위원** 이처럼 소비자원이 진행하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메프 재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 수락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 버리고 또 소송을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李憲昇 위원** 여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사안별로 이런 티메프의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넥슨 화률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220억 원의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분쟁조정 성립률이 한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고요.

○**李憲昇 위원** 이번에 보니까 환급 결정되고 나서 일부 업체에서는 조정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조정 결과에 응하는 게 아니고 일부 간편결제사, PG사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만 환불을 해 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변제를 받더라도 피해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에 달하지만 정작 변제금액이 기껏 1만 1000원 변제받은 소비자도 있는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시간대로 가 버리고 결과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탈할 텐데 이 집단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잘된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분쟁을 조정한다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국내 사이버공격 피해 사고가 1000건이 넘게 나온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 해도 GS리테일이나 루이비통, 디올, 까르띠에, 아디다스, 머스트잇 등 국내 유통기업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굉장히 범위도 넓고 그 피해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해외 해킹 전문 잡지 프랙(Phrack)이라

고 들어 보셨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최근에 언론보도되면서 들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대표 해커 조직인 김수키가 우리 국군방첩사령부, 대검찰청 포함한 정부기관, 주요 포털, 통신사, 언론사를 지속적으로 해킹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 해킹 피해가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 위원회에는 아직까지 신고된 거는 없고요. 과기부나 다른 부처하고 같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거기 거론된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 저희 독자적으로 그 보고서를 구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국가정보원하고 혹시 공조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그 보고서 분석을 좀 해 본 다음에 필요하면 국정원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올해 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안마다 위원회가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조치 속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개별 기관에 묻기보다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께서 조속히 개인정보 유출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번 착수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고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는데 할 일이 많지요. 입법 과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국정감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님과 그다음에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님에 대해서 지난해 국감 때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보훈부장관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 저희 정무위가 생산적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거 다 살피셔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보훈부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훈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장관님께 당부드린 게 보훈부가 정치 논쟁에 가능하면 힙쓸리

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보훈부장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임기 문제는 오래된 여야 정치권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알박기 논란도 정권 교체기마다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훈부장관님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까 유영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떠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다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해 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훈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사를 잘 읽어 보면 맥락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분 발췌를 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훈부장관이 잘 조정해 주시라 하는 거를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저희 산하단체인 독립기관장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시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조정을 잘해 주셔야지 장관님도 앞장서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잘못해서 압력 넣고 힘으로 완력을 쓰다가는 공무원이 다쳐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늘……

○**위원장 윤한홍** 다 똑같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거는 보훈부장관님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윤미향 씨가 이번에 광복절에 사면이 됐습니다. 일본군 피해 본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광복절 날 사면하는 게 적절하냐고 보훈부장관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저도 복권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 말을……

○**위원장 윤한홍** 아니지요. 이거는 광복절 날 사면하는 게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같이 관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점잖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보훈부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체토론을 빌려서 오늘 대부분 현안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결산과 예비비 승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결소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장님,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위원님들도 소위 의결이 되고 나서 전체회의에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능하면 소위원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소위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원을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일단 예결소위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다음주에 우리가 전체회의를 다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빠르게 회의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의사진행 발언했을 때 답을 안 주셨거든요.

○위원장 윤한홍 그거는요 지금 간사님들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 이야기가 벌써 한 달,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래도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창민 위원 아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들이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허영 위원님 1분만 드리세요, 의사진행발언.

○허영 위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비교를 하시면서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의 지금 재판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무죄가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결을 통해서 변복되고 있고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위원장께서 그렇게 비교 포인트로 해서 하시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까?

○박범계 위원 거의 무죄로 지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허영 위원 정정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뭘 정정합니까?

○허영 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아니, 대법원 판결 난 사항을 무슨 정정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지금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한 사건에 광복절 날 사면하는

게 맞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대법원 판결 난 게 맞냐 틀리냐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영 위원**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 대법원 판결 난 것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법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지요, 여러분이.

○**한창민 위원** 그것을 횡령범으로 단정을 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범계 위원** 주요 골자가 무죄가 났는데 마치 전과자 신세인 것처럼 그것을 왜 인용을 하냐 이런 취지를……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양수 위원** 아니, 횡령 나 가지고 재판한 것 실형까지 받았는데 뭘……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양수 위원**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법원 판결을 무시합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만 하시고.

○**이양수 위원** 다시 재심 신청하든지.

○**위원장 윤한홍** 여기서 윤미향 의원을 편들 것 없지 않습니까? 그만하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소위 끝난 다음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추경호 한창민 허영

○**첨가 위원(1인)**

유동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율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보훈문화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 나치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
독립기념관
관장 김형석
88관광개발㈜
사장 서정천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총무기획관 노혜원
개발협력기획관 김진남
청년정책기획관 김준민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민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사무총장 장영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유성욱
기획조정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영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유대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김복규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재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지준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심사보호국장 김웅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사무처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